KiRi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미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보험료 조정 이슈

김윤진 연구원

요 약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보험료 조정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백신 미접종자의 높은 위험률로 인한 접종자 보험료 부담 가중 및 보험자 손실 관리 측면에서 보험료 조정은 타당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한편에서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백신 접종 여부로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비판적 견해를 보임. 미국과 달리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높은 국가일 경우 또는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보험료 조정은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장기적 차원의 논의가 요구됨

○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보험료 조정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1)]

- 2021년 11월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약 51%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8%로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접종률이 저조한 편임[2)]
- 코로나19 백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8월 미국 Delta 항공사는 백신을 미접종한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단체 건강보험에 한 달에 200달러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함[3)]
- 코로나19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팬데믹'을 넘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엔데믹'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어, 생명·건강보험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보험료 조정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미접종자의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위험률)로 인한 접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보험자 손실·위험관리 측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타당하다는 평가가 있음

- 미국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연령표준화사망률(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4)]은 접종자 사망률의 11배에 달함[5)]
- 리스크 풀링을 통해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의 특성상,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한 위험그룹에 속하게 되면 미접종자의 높은 위험률로 인해 접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6)]

1) RGA(2021. 10), "Vaccination Status: Insurance Pricing Consideration"
2) New York Times "World Covid Vaccinations Tracker;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1/world/covid-vaccinations-tracker.html
3) CNBC(2021. 9), "Delta Air Lines announced a $200 monthly health insurance surcharge"
4) 연령표준화사망률이란,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가중치로 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해당 연령의 가중치에 곱하여 가중평균한 값임
5) Heather Scobie et al.(2021. 9), "Monitoring Incidence of COVID-19 Cases, Hospitalizations, and Deaths, by Vaccination Status-13 U.S. Jurisdictions, April 4-July 17, 2021"
6) CBS News(2021. 8), "Unvaccinated workers could end up paying $50 more for health insurance-per paycheck"

- 백신 미접종자의 건강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주에 의해 적절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한, 위험이 높은 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과 손실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조치임[7)]
  - 비슷한 사례로, 미국 건강보험 체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흡연자에게 상이한 요율(할증)을 적용하여 비흡연자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8)]

○ **이외에도, 미접종자 치료비로 인해 미국 의료재정 지출 및 사회적 부담 확대 문제가 예상되어, 접종 여부 질문을 바탕으로 한 건강 보험료 조정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 미국 KFF(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2021년 6~8월 3개월 간 코로나19 치료로 입원한 환자의 86%가 백신 미접종자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의료 보험제도(Nation's Health-care System)에서 약 57억 달러의 예방 가능한 비용(preventable costs)이 지출되었다고 추정됨[9)]
- 미접종자를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는 납세로 운영되는 공적 보장 체계, 고용주, 근로자, 개인 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아우르기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미국에서는 2023년 Open Enrollment(미국의 차년도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기간)부터 보험 가입 시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하여 보험료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10)]

○ **한편, 코로나19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신 미접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음**

- 코로나19 위험률이 다른 질병 위험률과 달리 선형적 리스크(Linear Risk: 보험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위험수준이 지속됨)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보험료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단순히 미접종자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다는, 접종자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백신을 미접종한 상태에서는 제한된 수준의 담보를 보장하는 등 단기 리스크에 적합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보험이 필요한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백신 접종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 적용은 접종을 촉진하여 사회 면역 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건강상태(기저질환), 종교적 신념 등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11)]

○ **미국과 달리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높은 국가일 경우 또는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장기적 차원의 논의가 요구됨**

---

7) National Law Review(2021. 10), "Employer Vaccine Surcharges-Yes, You Can"
8) 홍민지(2020), 「보험회사 관점의 흡연리스크」,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9) Amin & Cox(2021. 9), "Unvaccinated COVID-19 hospitalizations cost billions of dollars"
10) Kiplinger(2021. 9), "Penalty for the Unvaccinated?"
11) National Law Review(2021. 10), "Health Plan Surcharge for Unvaccinated Employees: New Guidance Provides a Roadmap"